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선정

전북자치도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싱크탱크 전북연구원(원장 이만호)이 민선 8기 비전과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2025년 10대 연구 아젠다를 선정했다.

전북연구원은 12일 이슈브리핑(315호)을 통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의 비전과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거점 조성 △새만금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도정 5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10대 연구 아젠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0대 연구 아젠다는 △백년대계 미래산업 성장엔진 점화 △실감 민생경제 강화 △농생명산업으로의 혁신과 대응력 강화 △문화관광자원의 글로벌화와 메가 스포츠대회 발굴 △사립·기업·자본이 모이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 △전북형 일자리와 워라밸에서 찾는 인구해법 △인구감소시대 초광역권 생존 전략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안전망 강화 △청정환경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이 키우는 인재, 인재가 키워가는 지역이다.

먼저, 도민경제 부흥은 ‘전북의 게임체인저형 성장동력 창출’로 전북 미래의 산업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기 위해 △백년대계 미래산업 성장엔진 점화를 첫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였으며,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육성 전략,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방안, 전북자치도 대마(헴프)개발공사(가칭) 설립 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전북자치도 2025년 백년대계 설계 연구 아젠다 발표

5대 도정 목표 구체화·정책 선도 위한 연구과제 선정

선정했다.

또한, △실감 민생경제 강화를 두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지원 방안, 전북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방안, 전북형 생활물류 사업화 모델구상, 전북 투자진흥기구 설립 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농생명산업 수도 부문은 ‘농업·농민·농촌이 상생하는 농생명산업’을 창출하고자 △농생명산업으로의 혁신과 대응력 강화를 세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농생명산업지구 전문인력육성 방안, 농촌기본소득 정책도입방안 마련, 농식품산업 고도화(스마트 소규모 가공시설 활성화),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부문은 ‘K·문화·관광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통해 전북만의 전락을 찾고자 △문화관광자원의 글로벌화와 메가 스포츠대회 발굴을 네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였으며, K·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방안, 전북권 문화도시의 글로벌화(글로벌 문화도시) 지원, 중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세계 산악올림픽 창설 및 개최 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새만금도약·균형발전 부문은 ‘새만

금 킬러콘텐츠 발굴과 지역 소생’을 위해 국가거점도시로서의 △사립·기업·자본이 모이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을 다섯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였으며,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새만금 농생명융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새만금 유통물류 복합비즈니스 지구 조성 방향,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등의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형 일자리와 워라밸에서 찾는 인구해법을 여섯 번째 아젠다로 제시해 실효성 높은 정책의 발굴을 위해 함께출산을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학습과 휴가를 함께하는 라케이션(Leaning+Vacation) 제도화 방안, 전북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등의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인구감소시대 초광역권 생존 전략을 일곱 번째 아젠다로 제시했으며,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전북자치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계획안 수립, 전북자치도 국도·국지도 추진 전략 수립,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30분 농촌생활권 조성 방향 등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도민행복과 희망교육 부문은 ‘주민

복지와 더불어 교육’의 전략을 가지고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안전망 강화를 여덟 번째 아젠다로 제시했으며, 주요과제로 전북자치도 아동돌봄정책 통합추진체계 기반 구축,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현황 및 지원방안, 전북자치도 청년 니트족 현황 및 유형별·특성별 정책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조사·개선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청정환경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아홉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여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책분석, 전북자치도 그린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 추진전략, 전북자치도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열 번째 아젠다로 △지역이 키우는 인재, 인재가 키워가는 지역을 제시하고 중추권 정주형 인재양성 직업교육 운영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전북자치도 청소년 성장지원 조례 제정방안,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10대 연구 아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포럼, 세미나, 이슈브리핑 발간, 이슈&트렌드 특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연구성과가 확산되고 피드백될 수 있도록 정책 환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사진 오른쪽)이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측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옌청시 저우빈(周斌) 당서기와 점견했다.

새만금개발청, 중국 옌청시와 협력 강화

김경안 청장, 중국 장쑤성 옌청시 당서기와 점견해 협력 관계 다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2일 한중 산업협력단지(이하 산단)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측 한중 산단 소재지 중의 하나인 장쑤성 옌청시 저우빈(周斌) 당서기와 점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의 방문으로 새만금개발청은 한중 산단의 협력 가능 사업을 모색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여 양국 간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한다.

김경안 청장과 저우빈(周斌) 당서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로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이날 저우빈(周斌) 당서기 일행은 새만금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고, 한중 산단 내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입주기업 성일하이텍을 방문하여 새만금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새만금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핵심 인프라 구축, 규제 개혁 등의 친(親)기업정책을 추진해 11조2,000억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양측 산단 입주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임시회 개최

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의장 유익식)가 12일 제291회 완주

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유익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일 월요일 지방시대위원회 방문을 거론하며, 통합 논의는 오직 주민을 위한 것이야 한다고 발언을 열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이 전북도와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추진 된 점과 행정 효율성을 가장한 전북 시간간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될 것, 그간의 완주군이 이룬 발전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만 번지르르한 통합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민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데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완주의 역사 문화를 지키고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닌 군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1번지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에는 각종 조례안 심의를 비롯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12일 제314회 임시

회를 개최하며 2025년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25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한 17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일 무주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 위원(대표의원 황인동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최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을 의원 민정일치로 채택했다.

문은영 의원은 ‘무주 관광과 지역경제를 위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소통을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밥쌀용 육성품종 ‘신동진1’ 식미평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신동진1의 품질과 맛을 직접 평가하고 있다.

전북농기원, ‘신동진1’ 식미평가회 개최

외관 품질·병해 저항성 우수… 평가회서 긍정적 반응

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전북지역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한 신품종 소개와 ‘신동진1’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밥쌀용 육성품종(신동진1) 식미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회에는 경제부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도의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농업·RPC, 쌀 재배 농업인 단체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신동진1’은 우수한 품질과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대표 품종이지만, 한 품종에 집중 재배될 경우 이상기상과 병해충 피해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품종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지역 적응성이 높은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미호’, ‘참누리’, ‘정다미’ 등의 우수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11건의 쌀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벼 품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동진1’은 기존 ‘신동진’에서 유래된 품종으로 외관 품질이 우수하고 상품성이 높으며, 카다리병과 벼흰잎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신동진1’을 개발한 농

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지웅 작물육종과장이 품종의 특성을 설명하고, 도내 확대 보급을 통한 ‘신동진1’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신동진1’을 개발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지웅 작물육종과장이 해당 품종의 특성을 설명하고, 도내 확대 보급을 통한 ‘신동진1’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주비빔밥에 어울리는 최적의 쌀 품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호도가 높은 ‘신동진1’을 활용한 전주비빔밥을 시연했다.

향후 전주비빔밥 전용 품종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해 전북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농협 관계자 및 농업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전북 쌀 브랜드 육성과 벼 품종 다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신동진1’이 ‘신동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보급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청년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참여자 모집… 온라인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청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질 도움이 되는 지원항목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으로, △면접비 △면접장 대여비 △면접 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면접비와 면접 장장 대여비는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회당 최대 5만 원씩 2회까지 지원하며, 면접 사진 촬영비는 최대 2만 원을 지원한다.

자격증 응시료는 2025년 실제 응시한 시험이라면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회당 최대 5만 원씩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시험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이다.

신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2030.or.kr)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7-2030, 063-220-8938)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강화 위한 본격 활동 착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

탄소중립 정책 이행력 확보로 실질 성과 도출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13조와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운실가스 감축 대책 7개 부문 72개 과제와 △대응 기반 강화 대책 9개 부문으로 환경부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점검 절차는 △점검 계획 수립 △추진 실적 검토 △결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서는 자체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주관 부서인 탄소중립정책과는 이를 종합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전북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을 거친다. 위원회는 과제별 계획수립의 충실성, 추진 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역할을 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후 전북자치도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7월 31일까지)와 전북자치도의회(하반기)에 보고해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첫 번째 점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2월 19일 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점검 목적과 점검표 작성 방법을 공유하고, 부서 간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탄소중립 정책 이행력 확보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업국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산후 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신청 기간이 기존 출산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며, 바우처 유효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 출산가정이 더욱 여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4개소였던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6개소로 확대해 서비스 제공 인력을 더욱 확보했다.

특히, 친정어머니도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건강관리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 가정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강제인 산모 등 장애 신생아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